



한 · 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만이 살길이다!

지난 10월 24일 제네바에서 타결된 한·칠레 FTA협정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무차별 타격은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각계 각층에서 밝혀진 절대적인 경쟁력열세에도 불구하고, 장미빛 환상에 사로잡혀 막상 막대한 피해를 볼 농업부문을 철저히 무시하면서까지 국내농업을 사각지대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한농연중앙연합회를 비롯한 WTO 범국민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 10월 24일, 한·칠레 FTA협상 체결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비준을 막기 위해 두팔을 걷고 나섰다. 내년 상반기에 개최될 국회에서 한·칠레 FTA에 대한 국회비준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서명운동에 나선 것이다.

본지를 통해 타결된 반농업적 한·칠레 FTA협정의 허와 실, 그리고 한농연과 WTO국민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비준거부 국회의원 서명운동” 진행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칠레 FTA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쌀과 사과·배가 완전 제외품목이어서 국내농업의 큰 피해는 없다?

지난 10월 정부의 주도로 잠정 타결된 한·칠레 FTA협정에서는 쌀을 비롯한 사과·배 3개 품목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관세양허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 통상당국은 주식인 쌀과 사과·배가 빠진 만큼 우리 농업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억측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통상전문가들은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먼저 쌀은 칠레의 관심품목에서 크게 벗어난다. 그 이유는 칠레가 우리나라에 팔아먹을 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칠레 쌀 생산량은 연간 9만톤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급률은 68%(2000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중단립종은 생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애초부터 쌀과 관련품목 19개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을 정도로



등비율로 관세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철폐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미 포도는 지난 1995년부터 양허관세를 적용해 수입되고 있으며 2002년 양허 관세율은 46%, 2004년은 45%로 점차 줄어들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칠레산 포도에 대한 관세는 협정발표 연도 양허관세를 기준으로 매년 감축해 10년내에 무관세가 된다. 뿐만 아니라, 칠레산

관세철폐 대상 구분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통상전문가들은 사과와 배 역시 국내산 가격이 칠레산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보다는 오히려 위생 및 검역문제가 핵심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상당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국내 과일 농업은 관세와 식물검역조치 가운데 식물검역에 의존하여 보호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번 한·칠레FTA협상은 물론 향후 이루어질 DDA(도하개발라운드)협상 등에 있어서 동식물 검역 관련 협상이 국내 과수산업의 미래까지 결정할 핵심 주제가 된다는 것이다.

포도의 계절관세 부과로 막대한 피해를 막았다?

이번 협상에서, 포도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6개월의 기간에 한해 10년내에 매년 균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 부과 시기는 칠레산 포도의 수확기와 우리 시설포도 출하기가 겹쳐, 시설포도는 물론 시설과채류 전반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통상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즉, 더 이상 국내 농민들은 농사지를 품목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복숭아, 돼지고기 등 10년 내 무관세 전환할 만큼 경쟁력 있다?

한·칠레 FTA협정에서 복숭아와 돼지고기·단감·키위·사과주스·포도즙 등은 협정발표 후 10년 동안 균등하게 감축, 무관세로 전환기로 합의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과일 다음으로 수출(연간 수출액 4,600만 달러)이 많은 돼지고기의 경우 올 상반기 중에만 냉동삼겹살 110t이 양허관세율 27%로 수입돼 협정 발효와 함께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복숭아통조림 등 과실가공품,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등은 7년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고, 오렌지주스 등 과실주스는 대부분 9년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으로 분류됐다. 조제분유와 배 가공품 등 가공식품류는 협정발표 시점부터 5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1년간 협상을 하고, 최장 10년 동안 관세를 감축해 철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당류와 면류, 초콜릿 등은 5년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으며 종우와 종돈·사탕수수·사료첨가제 등 교역 가능성이 적은 품목은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를 철폐키로 하는 등 대폭적인 개방을 하고 말았다.

매년 무관세로 일정물량을 할당하는 관세할당 (TRQ) 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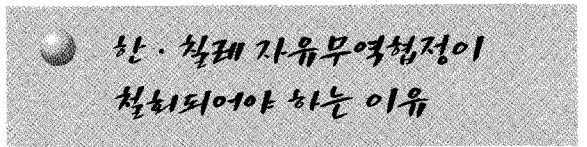
이번 협상타결로 쇠고기와 닭고기, 유장(탈지분유 부산물) 등 대부분의 축산물과 자두·감귤 등은 협정 발효와 함께 매년 무관세로 일정 물량의 관세할당을 제공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문제는 뉴라운드협상 종료 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관세할당 물량은 품목별로 매년 300~400톤 정도의 상징적인 수준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농림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소비량에 비해 소량이라고는 하지만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큰 상황에서 무관세로 국내시장에 들어올 경우 시장가격 교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칠레 역시 매년 상징적 수준의 관세할당 물량에 그치지 않고 매년 그 양을 늘리려 할 것이며, 특히 DDA(도하개발라운드)협상 이후 관세감축을 포함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협

상이 있을 경우 해당 품목별로 큰 충격이 예상된다.

고추와 마늘 등 품목은 DDA(도하개발라운드)협상 이후 논의

고추와 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류, 콩과 옥수수 등 곡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DDA 농업협상이 종료된 후에 다시 관세개방 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DDA 농업협상 타결 시점이 200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2년 정도의 협상기간을 거친다 해도 2006~2007년에는 관세철폐나 관세할당의 형태로 국내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는 셈이다.



농업부문의 엄청난 피해액은 도저히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반농업적인 한·칠레 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칠레농업'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있다. 이에 따른 국내 농업피해를 직접피해수준에서 단순 계산함으로써 대체작목이 전무한 실정인 국내농업의 도미노 붕괴현상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칠레의 농업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적인 유통망을 지닌 다국적 기업이 생산과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수출에서 포도1위, 자두2

위, 사과·배·키위 3위, 복숭아와 체리는 5위를 차지하는 농업대국이다. 뿐만 아니라, 칠레의 수출을 주도하는 경영체들의 평균 경지면적은 10,150ha로 우리의 7,800배에 달할 정도로 칠레 농업은 막강하다.

● 칠레 농업 현황

구분	경쟁력(세계1위)	생산량	자급률
과일류		409만톤	199%
포도	세계1위	190만톤	188%
자두	세계2위(미국)	16만톤	150%
사과	세계3위(프랑스)	100만톤	550%
배	세계3위(아르헨)	33만톤	170%
복숭아	세계5위(이태리)	27만톤	150%
체리	세계6위(미국)	31만톤	129%

만약, 이러한 막강한 농업경쟁력을 자랑하는 칠레와의 FTA가 국내 '국회비준'을 거쳐 최종 체결될 경우, 칠레산 과실은 다양한 방식의 양허기준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다량수입되어 국내 과실 가격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 국내산 가격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다. 특히, 칠레산 과일은 40~50%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할 경우에도 국내산 가격의 2/1수준에 그칠 정도로 가격경쟁력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과실류와 대체성이 높은 국내 과채류 가격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례로 칠레산 과실류의 수입이 우리나라 연도중 상반기에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상반기에 집중출하되는 국내산 딸기, 토마토, 참외, 수박, 메론 등 주요 과채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 1999년 12월 무더 대량수입된 미국산 오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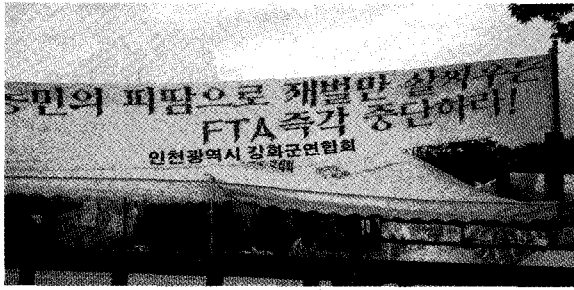
로 인해 국내산 감귤은 물론 방울토마토, 수박 등 주요 과채류의 가격이 예년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던 경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농협에서 추산한 '한·칠레 자유무역'으로 인한 국내농업 직접피해액은 관세 철폐 시 연간 복숭아가 1,181억원, 자두가 521억원, 감귤이 3,753억원, 쇠고기 6,276억원, 돼지고기 6,310억원, 닭고기 1,559억원 등 이들 5개 품목만 더하더라도, 1조9천600억원에 달한다. 물론 계산방법에 따라 다르고 과다 계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이는 앞서 서술한 간접피해를 거론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이기 때문에 협정체결로 인한 국내농업부문의 충격은 더욱 클 것이다.

중남미 시장진출? NO!, 한국 공산품의 전략적 시장교두보? Oh, NO!

현재 칠레인구는 한국에 비해 32%, 1인당 GDP는 56%, 구매력은 한국의 18%에 불과하여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우리 공산품은 칠레 시장에서 이미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 추가적인 수출여력이 크지 않다.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칠레를 통한 중남미 수출확대"도 「남미자유무역협정」가입국들 사이의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을 간과한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순진한 희망에 불과하다.

실례를 들자면, 국내 공산품은 칠레시장에서 전자기 69%(1위), 세탁기 65%(1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타이어와 배터리, 섬유, 엘리베이터, PVC 시장점유율도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도 일본에 이어 2위 (시장점유율 26%), 냉장고도 칠레산에 이어 2위 (시장점유율 31%)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은 경제적 실익조차 전혀 없다.

현재 칠레는 단일관세부과체제를 가진 나라로 현재, 전 품목에 9%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3년 6%, 2010년에는 전 품목 무관세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우리가 굳이 농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몇 년 앞당겨 공산품의 무관세를 요구할 이유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미 밝혀진 바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서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민경제전체의 후생은 농업을 포함한 전체산업을 무관세방식으로 개방하는 경우와 농업을 완전히 제외하는 경우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반면, 국내 전체 무역수지는 농업부문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6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칠레 FTA가 '이미지 제고용'이라면 너무나 비싼 협정이다

최근 언론과 정부일각에서는 한·칠레FTA 타

결을 앞두고 'FTA협정 한 건 없는 무역후진국', 이로 인한 '대외적 이미지 손상' 등을 거리낌없이 말하곤 했다. 게다가, 지난 10월 25일 잠정타결 이후에는 또다시 '너무 늦은 FTA타결' 등을 앞세우면서, 농업피해를 전제로 한 협정체결을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엉뚱한 근거를 가지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논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칠레 FTA가 단순히 대외적 '이미지 제고용'이라면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이며, 그것도 한 국가의 식량과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농업과 400만 농민을 대가로 치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농업은 특정 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확실적인 세계화 논리에 의한 통상정책으로 저울질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세계 모든 나라들은 국가의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에 대한 보호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간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R협정 이후 작부체계가 식량작물 중심에서 상업작물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 포도, 키위 등 과실부분의 세계최고 경쟁력을 가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과수농가 뿐 아니라 전 농가의 위기를 초래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한·칠레 자유무역은 상호보완이 아닌 경쟁관계이다.

본래 자유무역협정은 산업내부에서 서로 주고 받을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

리나라와 칠레는 농업 내부적으로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분야가 없는 실정이며, 공산품 분야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칠레와 우리가 계절이 반대라고는 하나 최근의 저장 및 유통기술과 수송 능력은 거리상의 제약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발달했으며, 국내 시설농업 또한 발달해 계절은 교역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특히, 칠레는 최근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축산, 과일, 채소류 등의 생산을 늘리고 있어 우리나라와 보완관계보다는 경쟁관계에 있으며, 과일산업의 강국인 미국도 자국의 과일산업 보호를 위해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제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칠레의 농산물 경쟁력은 가히 '최고'임을 알 수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은 미국 등 WTO개방압력을 부추길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UR협상 당시 농업의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관세인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농산물 수출 강국들은 이번 한·칠레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비롯해 자국농산물에 대한 보호의지, 결과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FTA를 통해 우리 스스로 농업을 개방한다면 우리가 지난 UR협상에서 어렵게 얻어낸 '유리한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WTO협상에서 우리가 강조해온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





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해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전면적인 농산물을 내어준 한국에게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강국들은 동등한 대우를 주장할 것이며, WTO회원국들의 수입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한·칠레 FTA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한·칠레 FTA 국회비준거부 국회의원 서명운동 전개

한농연을 비롯한 WTO국민연대 소속 79개 농민·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월 25일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한·칠레 FTA를 추진함에 따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칠레 FTA 국회비준 거부'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한·칠레 FTA 국회비준거부 국회의원 서명운동'은 지난 9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미 결의한 사항으로, WTO국민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해 박홍수 한농연중앙연합회장 등 농민단체장들이 지난 10월 17일 농림부 점거 농성시 농성장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이 재차 약속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한농연을 비롯한 WTO국민연대 소속 79개 단체는 지난 10월 24일부터 '한·칠레 FTA 국회비준거부 국회의원 서명운동'에 들어갔

다. 특히, 한농연은 각 도·시·군연합회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각 농촌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1명을 비롯해 총 35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한 상태이며, 향후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 명단

(의원 존칭생략, 가나다 순)

강성구, 고진부, 권기술, 권오을, 김동욱, 김영진, 김용갑, 김용학, 김황식, 문석호, 박재욱, 신경식, 신영국, 심규철, 양정규, 원철희, 윤한도, 이방호, 이상배, 이완구, 이우재, 이인기, 이정일, 이해구, 장성원, 정병국, 정장선, 정창화, 정철기, 주진우, 천용택, 최선영, 최연희, 함석재, 허태열

또한, WTO국민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 11월 4일 긴급회의를 열고 '국회 비준거부 서명운동'에 각 단체 지역조직을 총동원하여 모든 국회의원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기로 결의했다. 특히, 도시지역 국회의원의 서명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 동참키로 하는 등 반농업적 한·칠레 FTA협정 체결을 막기 위해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서는 KBS, MBC, SBS, EBS 등 중앙 방송사에 한·칠레 FTA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청하여, 대선후보들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한·칠레 FTA 비준거부를 부각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농연